

주간변혁산별

제21호

■2008.9. 1(월)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actionnet@naver.com

공안정권 과녁 노동운동 무력화

**[공안정국] 사노련 · 원정화 간첩사건 ... 촛불투쟁 족쇄 · 재벌정책 강행 포석
계속되는 촛불 · 노동자 현장투쟁 · 금속노조 파업 ... 노동자, 강력한 저항세력**

이명박 정권이 원하는 것은 18대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이용해 민주주의·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반촛불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과 원정화 간첩 사건을 터뜨렸다. 촛불운동으로 등장한 거리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만 있다면 이명박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베이징올림픽 등으로 이명박 지지율도 20~30%대로 약간 올라갔다.



명을 결집했다. 또한 31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에 항의하는 동시 법회가 전국 1만여 개 사찰에서 열렸다. 촛불시위는 이렇듯 천주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넘나들듯 이명박에 저항하는 다양한 세력의 시위공간을 열어제꼈다.

촛불은 범불교 저항운동으로 진화

불교운동이 저항의 중심이 되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겨났다. 불교계의 성난 분노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불교계가 요구하는 이명박 공개사과와 어청수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집회·시위법은 복면, 확산기 등 금지, 벌금액 상향, 집회 주최자 뿐 아니라 참가자도 처벌 내용으로 개악하겠다고 한다. 정보통신망 개악법은 사생활 침해 등 타인 권리가 침해되면 지체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포털업자가 벌금을 내야 한다. 집회 시위로 인해 손해를 본 상인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그러나 집권 6개월만에 가까스로 열

‘기그’가 된 사노련 · 원정화 간첩사건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시도는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전초전이었던 사노련 사건과 원정화 간첩 사건은 우스운 꼴이 되고 있다. 사노련 사건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경찰의 기가 죽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은 정치이념보다 자립경제 생활형, 사랑추구형 간첩으로 기존 경직된 간첩에 비하면 코믹스러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의 진술 내용이 의심받고 있다. 특히 북한 공작원 출신의 탈

북자들이 신빙성있게 제기하고 있어 간첩 사건이 한참 부풀려진 사건임이 점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도 완전히 꺼졌다고 할 수 없다. 5월2일부터 지금까지 1백번 넘게 열린 촛불집회에서 8월 24일 현재 1,470여 명이 연행되고 이 중 26명이 구속됐다. 촛불의 정신과 저항은 불교계 집회로 이어졌다. 불교계에선 지난 8월 27일 ‘기독교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6·10 집회 이후 서울 최대 집중규모인 20만

린 18대 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1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또 남경필 등은 대북 식량 지원을 한나라당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YTN 공기업 소유 지분을 매각해 사유화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관료의 주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들은 바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분열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분열하는 지배계급 · 저항하는 노동

무엇보다 주목할 곳은 노동운동이다. 정권과 언론은 외면했지만 금속노조는 지난 27일 임단협 타결사업장까지 11

만명이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정치파업을 벌였다. 올 초 이명박이 노사화합 사업장이라 칭찬했던 GM대우자동차에서 강력한 장기 파업이 벌어졌고,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부결까지 됐다. 무파업을 원했던 현대차 자본은 주간연속2교대 재협상을 해야 했고, 파업도 막지 못했다. 기아차 역시 지난 주에 파업을 벌였다.

공안정국이 먹히지 않았던 근본 이유에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이 이명박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보수언론들은 파업에 대한 잔혹한 언론공격도 하지 못하고

파업보도를 거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경제위기가 침체로 빠져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들조차 지난 6개월 간 MB정부의 성과에 대해 84%가 '기대 이하'라고 답했다. '경제대통령'이라고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대중저항의 중심배경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오직 경찰과 억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가능성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안정국 분위기를 확 견어내려면 더 단호하게 노동자들의 투쟁과 저항들이 있어야 한다.

사노련 · 사노맹 그리고 노동자

[공안정국] 되돌아본 노태우 시절 ... 공안세력, 노동단체 체포에 올인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1981년부터 1987년 사이에 총 1,512명을 구속했지만 결국 6월 항쟁은 전두환을 끌어냈다.

1987년 6.29 사건 이후 뜸해졌던 국가보안법 적용의 노동조직사건이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하면서부터 다시 급증했다. 공안합수부는 89년 3월 22일,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과 관련, 청와대에서 열린 공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좌경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상설대책기구를 지시함으로써 4월 3일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안합수부는 77일만에 해체되었는데 그 동안 문목사 방북사건(8명 구속, 26명 불구속), 인노회 등 이적단체(21명 구속, 3명 불구속), 노사분규 주동 및 의식화배후조정(60명 구속)

등 77일 동안 317명을 구속시켰으며 공안합수부 해체 이후에도 노동관련 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지속됐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두환정권 시절처럼 노동조합 자체를 불온시하면서 원천적으로 탄압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부는 공안합수부 발족한 후 각 지역에서 임금인상투쟁과정에서의 연대투쟁을 바탕으로 지역노조협의회가 결성되던 89년 시기부터 대규모 파업을 전후해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용공조직'으로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가했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2월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8명 강제연행을 시작으로 경기남부 노동단체 일제 수사사건(1989년 4월, 20명 연행),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1989년 10월, 20명 구속),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1990년 2월, 12명 구속), 북부지역노동자연맹

(1990년 2~3월, 7명 구속),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1990년 4월, 15명 구속),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1990년 4월, 8명 구속), 경수지역노동자연합(1991년 3월, 6명 구속),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1995년 6~11월, 5명 구속) 등을 잇따라 터뜨렸고,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공안탄압으로 짓밟았다.

뭐니뭐니해도 노태우 정권이 터뜨린 가장 큰 사건은 1990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이었다. 노태우는 1989년 11월 12일 결성된 사노맹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벌여 1991년 3월 박노해 시인 구속을 시작으로 총 300여명을 기소했고, 구형량만 총 500년을 넘는 해방이후 최대 공안탄압을 벌였다.

보안법철폐 노동자 위한 투쟁

[공안정국] 사노련 체포 목적은 좌파활동가 위축 ...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해야



아마 사회주의노동자연합(아래 사노련)의 오세철 교수 등 7명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영장이 기각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것은 사노련이 온건한 개량주의적 좌파 조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사노련은 세계적 혁명적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 행동을 통한 자본주의 철폐 그리고 이를 위한 노동자혁명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 쟁점에서도 급진 좌파적 입장을 고수한다. 예를 들면, 주간연속2교대에 대해선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위해” 회사와의 야합을 거부하고 현장투쟁을 중심으로 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다. 사노련은 비록 소수파이지만 계급정치 주장은 원칙적이다.

한편 보수언론들은 사노련 영장기각에 미묘한 시각을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경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법원의 생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공안사건 수사에 반영할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친북이든 아니든 국가의 안전

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했지만 그와 함께 “국보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을 함께 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방치

돼 온 일부 극렬좌파단체 수사의 신평탄”이라며 환호했지만 영장 기각 후엔 이렇다 할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 이명박의 공안정국 시도가 보수언론 사이에서도 그다지 인기가 높은 편이 아니다.

보수언론에서도 인기없는 공안탄압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나 보수언론들이 사노련 탄압을 정당화하려 했던 촛불집회 참석 때문이었다. 사노련이 촛불시위의 배후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노련 깃발은 광화문 사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고 최소 1~2만명이 모였던 5~6월에는 보이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깃발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6월 말경이었다. 사노련은 오히려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풀”처럼 끈질긴 촛불시위로부터 감동을 받고 뒤늦게 참여했다.

오히려 사노련의 구속소식이 들리자 뜸했던 사노련 자유게시판은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누리꾼들의 글로 넘쳐났다. 더 나아가 사노련이 주장하는 정치적 주장들에 대한 논쟁들도 이뤄지고 있

다. 사회주의가 맞는가, 국유화가 맞는가, 허황되다,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등등.

노동자계급의 대안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악플(악성 리플)보다 무플(리플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다.

‘구속자 석방하라’ 누리꾼 넘치는 사노련 게시판

한편으로 보수언론과 정부는 사노련 탄압사건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로 나아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벌써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좌파 내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노련 탄압이 좌파활동가들을 위축시키려 한 것도 분명하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노동해방이 사노련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와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하는 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까 아닐까”하는 자기검열적 생각은 국가 탄압에 대한 위축을 말하는 것이다.

촛불시위가 사노련의 영장 기각을 만든 배경이지만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서도 사노련 같은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노동자계급의 대안적 정치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논쟁하고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해선 안 된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든 다른 사회주의든 노동자계급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온전히 쟁취해야 한다.

문구수정 NO 전면재협상!

[주간2교대] 현대차울산 본관 농성기 ... 물량보전 의견접근안 '현장의 힘' 무력화

지난 8월 14일 현대차지부 19차 교섭에서 윤해모 집행부는 현장여론을 무시하고 주간2교대제 시행에 따르는 노사 양측 잠정합의안 형식인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각 사업부별 대의원에게 보고했다.

이 의견일치안을 놓고 팽팽한 토론이 벌어졌다. 각 사업부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의견일치안'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각 조항별 내용을 보면 기존의 단체협약마저 축소 및 삭제되거나 물량보전 차원의 UPH UP 19%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사측의 논리 주장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M/H제도 개선위원회라는 아리송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조합원의 노동강도와 직결되는 M/H를 노사 대표를 꾸려 표준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내용에 현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현장의 힘 'M/H 협의' 무력화시키는 의견접근안

M/H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힘이었다. M/H 협의는 현장의 힘이자 조합원의 노동강도 저하에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의견일치안이 통과되면 각 사업부별 혹은 부서 대의원회에서조차 M/H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2009년 1월 1일 시행 ▲2008년 10월 전주공장 시범 실시 ▲2009년 1월 1일 완전월급제 도입을 전제로 단체협상 혹은 별도요구안으로 매년마다 사측과



합의해왔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이런 합의마저도 스스로 어겼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올해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공색한 변명을 듣는 대의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허탈할 지경이었다. 대의원들조차 이 지경이니 현장 조합원들은 더더욱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08년 지부교섭 실무협의 대의원도 물라

집행부는 4월부터 시작된 08교섭에서 중앙교섭에 집중해야 하므로 지부교섭은 실무협의로 전환하겠다고 조합원에게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지부 요구

안에 대한 실무협의 12차례, 실무본교섭 5차례를 진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실무협의 진행결과 내용은 철저하게 현장에 홍보하지도 않았고 대의원 대표 및 대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단지 추측만 할 뿐 공론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집행부와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하고 사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부교섭 단 두차례만에 주간2교대제에 대한 잠정합의 형식의 의견일치를 볼수 있던 말인가?

8월 18일 윤해모 집행부는 주간2교대에 대한 의견일치안과 남은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08임투 타결 입장을 가

지고 교섭에 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승용1공장 사업부위원회는 기만적이고 굴욕적인 의견일치안이 합의되어서는 이후 현장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칠 것을 천명하며 교섭 장소인 본관 앞 로비에 연좌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대의원들이 연좌농성을 시작하자 타 사업부 대의원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이날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현장 대의원이 시작한 본관 연좌 농성

윤해모 지부장은 “교섭을 대의원들이 막은 일이 현자노조 2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농성 대의원들에게 길을 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굴욕적인 안을 도저히 현장 조합원에게 전달할 수 없으니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했다.

결국 교섭은 진행되지 못했고, 8월 19일 기존 쟁대위 지침인 주야 2시간 파업지침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날 파업이 파업 형식이 아닌 보고대회 형식”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집행부는 노사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견일치안에 대해서 재협상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분노한 대의원들은 “솔직히 우리가 좇을만 안들었지 지부장이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다른 게 뭐냐?”며 항의했다.

‘이렇게 시행될 거라면 차라리 패기하라’

지부 집행부의 능력 부재라는 말이 현장에 나돌기 시작했고 조합원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의견일치를 볼 수 있는냐?”, “기존 휴게시간이 사라지게 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현장 조합원들은 ‘물량보전’으로 혹서기, 명절전날 출근 시간, 중복휴일, 안전교육 등 수많은 휴게시간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차



라리 이렇게 시행될 거라면 지금이 차라리 나으니 제발 현 집행부가 합의안을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해모 집행부는 또 다른 혼란을 만들었다. 현대차지부 구조를 보면 완성차 생산공장 1,2,3,4,5, 전주, 아산공장 조합원들은 주간2교대 의견일치안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대근무가 없는 판매, 정비, 남양, P/T공장(엔진, 소재, 변속기) 조합원들은 08 임금협상이 추석 전에 마무리될 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의견일치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합의된다면 그 피해는 생산공장 전체에 치명적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재협상이 아닌 문구 수정만 하고?

현장 제조직과 사업부위원회 및 현장 조직위원회에서조차 집행부의 의견접근

안에 대해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재협상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해모 집행부는 재협상이 아닌 문구 수정 형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어차피 총파업 투쟁을 결심했다면 의견일치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조합원의 힘을 빌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집행부에서 이번 9월 2일, 3일 주야 4시간 파업을 예정해 놓고 있다. 언론에서는 현대차동 차지부가 지난 파업으로 2년 연속 무쟁의가 깨졌다고 보도했다.

물론 무쟁의를 기대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단호해야 한다. 한번 잠정합의가 10년, 20년 아니, 40년이 지나도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간 2교대가 노동혁명이라고 말하던 집행부가 아닌가?

최소한 조합원들에게 패배감은 주지 말아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조합원이 사측에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정말 열심히 해보았더라는 성취감은 최소한 현장 조합원에게 줘야 되지 않는가?

비정규직 연대 해고자 복직 핵심

GM대우 잠정합의안 부결 의미 ... 내부 분열 노리는 차별안 극복해야

“역대 최고의 성과물, 08임·단협 잠정합의안 돌출”,

“오만한 GM자본을 완전 굴복시켰다”

지난 8월 25일 20차 협상에서 노사가 잠정합의한 이후 GM대우자동차지부가 낸 투쟁속보 제목이다. 그러나 ‘역대 최고의 성과물’은 찬성 48%로 부결됐다. 찬성 74%의 정비를 빼고 부평(47.7%), 군산(40.8%), 창원(44.1) 등 전 공장이 부결됐다. 6~70%의 가결을 기대던 집행부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던 GM자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노사 의견접근안은 ▲임금 82,000원 (호봉승급 12,097원 포함) ▲성과급 200%+ 220만원 ▲정리해고자 퇴직금 일부 재정산(퇴직시 지급) ▲신입사원 연월차 부분 회복 등이었다.

잘 싸우다 막판에 피그러지다

지부 ‘투쟁속보’의 소제목처럼 “중단 업는 파업, 전 조합원 참여투쟁”으로 이명박이 칭찬했던 노사화합의 GM대우 공장은 2008년 임단협에서 힘차게 일어섰다. 처음부터 완강한 투쟁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휴가를 넘기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불타올랐고, GM대우 노동자들은 5~60시간에 이르는 강력한 파업 투쟁으로 GM자본에 맞섰다.

그러나 GM대우차지부는 막바지에 GM자본이 노린 ‘노동자 분열 전략’을 넘어서지 못하고 말았다. 정리해고자 원상회복과 신입조합원 차별철폐, 창원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한 의견접근안은 노동자 내부를 갈라치는 ‘분열안’이었다.

정리해고 복직자 퇴직금 재정산의 경우 복직 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정산해 모범적인 투쟁을 통해 1~2차에 원직복직된 해고자들과 4~5차 복직자들의 격차를 크게 만들었다. ‘정리해고 원상회복 투쟁동지회’(정원투)는 “1600여 복직자들을 갈라치기하고 분열을 유도해 내부적으로 싸우게 만들어놓고 있는 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며 부결운동을 주도했다.

노동자 내부 갈라치는 분열안

신입조합원 차별철폐의 경우 연차휴가를 1~5개 늘리는 ‘타협안’이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핑계로 연월차를 축소시킨 ‘개악된 근로기준법’을 막아낸 금속노조 대부분의 사업장과는 달리 GM대우는 보건의료노조처럼 신입사원에게는 개악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고 있었다. 똑같은 조합원들이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차별의 문제는 일부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동일적용되어야 한다. 고남권 대의원을 비롯한 12인의 대의원들은 “내부의 차별을 용인한 채로 적용된다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 눈 감는 것 이상 아니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원공장 해고자 3인의 복직이다. 이남북 지부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동지들을 조합원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라며 해고자 복

공 고

전국금속노조 지부 대우자동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실시한 “2008년 8월 단협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지 부	찬성	기권	반대인원	투표율	찬성	반대	투표인원	비율(찬대비)
부 평	6,004	209	5,795	96.5	2,764	2,987	64	47.7%
군 산	1,845	55	1,739	97	739	1,054	5	40.8%
창 원	1,642	60	1,582	98.3	698	879	5	44.1%
정 비	657	35	622	95.3	609	206	7	74.1%
합 계	10,348	260	9,988	96.5	4,801	5,106	81	48.1%

2008. 8. 28

전국금속노조 조합 GM대우자동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재

직을 약속했다. 그렇다. 4년 동안 해고자를 방치해놓고, 내년 투쟁으로 또 다시 넘긴다면 누가 해고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는가? 이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이다. 무엇보다 김학철 박종철 엄상진 동지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아름다운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부평공장의 한 대의원은 “창원공장 해고자 복직이 임단협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GM대우의 3년 연속 흑자와 동종업종 노동자와의 차이, 장기파업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100만원 가량의 임금손실을 감안할 때 임금과 성과급 역시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사교섭에서 정리해고 원상회복, 신입사원 차별철폐, 창원해고자 복직이라는 ‘단결의 정신’을 외면하고 성과급 30만원을 더 주는 수준으로 합의한다면 이는 GM자본에 맞서 당당하게 싸웠던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퇴근파업 짜든관성 벗어나야

[현장] 임단협 부결 사업장이 많은 이유 ... 가결 원하는 건 집행부가 아닌 '자본'

임단협 투쟁은 노동조합의 축제다.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합법(?)적으로 자본과 맞짖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느슨했던 조합의 조직력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가름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오로지 성과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조직력이 강화되기는커녕 분열의 시발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합원들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으로 지도부를 평가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임단협 투쟁의 과정에 조합원들의 참여와 투쟁은 소홀히 한 지 오래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파업 중 퇴근지침이다. 언제부터인가 대공장을 중심으로 퇴근파업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중소사업장까지 대놓고 퇴근파업을 한다.

퇴근을 일찍 하면 조직력이 복원되는 것인가? 그 시간에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촛불투쟁, 민영화, 언론의 공공성, 공안탄압에 대한 토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견접근안 반대하면 집행부의 적인가?

지도부의 임단협 교섭 최대 목표는 축제도 조직력복원도 아닌 가결이다.



가결을 바라는 이는 지도부만이 아니다. 더 절박한 심정은 자본일 것이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된 방정식이 성립되게 된다. 교섭말미 조합원들의 분위기 파악하기 분주하다.

현재 우리가 처해진 조건에서 자본을 상대로 최선을 다한 투쟁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 공장과 다른 지회는 얼마에 타결되었는지, 이 정도면 천성이 나 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다.

지도부는 다른 지회보다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다른 지도부는 우리보다 못한 데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현장에서 의견접근안에 대한 반대는 적으로

규정하고 자본과 투쟁해야 할 힘은 내부적인 혼란으로 다 소진한다. 이게 무슨 임단협 투쟁인가?

올 해 유난히 부결난 사업장들이 많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불가인 상 폭이 워낙 심해 경제적으로 조합원들의 살림살이가 그 만큼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지금 임단협 투쟁이 뭔가 잘못 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조합원의 평가로 받아들이야 한다.

늦었다고 판단 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지금부터라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되돌아가야 할 때이다.

예전에 다 했던 것들 조합원들이 식상해서 안 좋아한다고 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휴대폰 사양이 매일매일 바뀌어가며 소비자를 유혹하듯이 조합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가며 조합원들을 유혹(?)해서 예전의 신바람을 다시 한 번 일으켜 보자.

기륭 총자본 총노동 대리전

사람 죽어가는데 형식적 투쟁 안돼 ... 1만인 행동 등 비정규직 항쟁 만들어내야

9월 1일부터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의 단식이 83일이다. 67일간 소금과 효소만 먹고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직 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던 동지가 금속노조의 투쟁을 믿고 내려왔지만 교섭을 다시 뚫어내기 위해 링겔을 꽂은 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기륭분회 동지들은 지나 8월 14일 제시된 '기륭의 2차 사내하청 공장의 1년 계약직'이라는 기만에 찬 회사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자본은 "기륭전자가 위로금을 이유로 합의안을 거부했다"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륭은 비정규직 투쟁의 본산(!)

"현재 노동계에선 기륭전자 공장은 '비정규직 투쟁의 본산(本山)'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 투쟁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기륭 투쟁은 원하던 원치 않았던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구도가 되어 있다. 기륭 투쟁의 승패에 따라 이랜드, KTX, 코스콤, GM대우비정규직 등 수많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륭은 금속노조 30여개 장기투쟁사업장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륭의 승리가 30여개 장기투쟁 사업장의 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김소연 분회장에게 금속노조는 새로운 투쟁, 새로운 교섭을 통해 기륭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기륭 투쟁을 받아안아 승리로 이끌겠다는 중앙쟁대위의 결정은 너무나 늦었다. 그래도 기륭 동지들은 금속노조를 믿고 단식하는 동지들을 눈물로 호소해 내려오도록 했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투쟁에 희망을 걸었다.

형식적인 집회와 문화제

그러나 금속노조는 2천여명이 모인 8월 21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형식적인 투쟁으로 끝내버렸고, 최동렬 회장과 면담을 끌어내겠다는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투쟁을 결의하며 현장에서 올라온 간부들은 집회 한 번 끝내고 지역으로 내려갔다. 부산양산지부의 한 간부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집회하고 문화제만 하면 되느냐?"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형식적으로 진행된 결의대회와 순회상경투쟁은 기륭 투쟁 승리의 어떤 전망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역시 형식적 집회로 치러졌다. 지부별 순회상경투쟁에 현대자동차는 단 한명도 결합하지 않았고, 완성4사 간부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순회상경투쟁도 30일로 끝나버렸고, 이후 계획도 없는 상태다. 링겔을 꽂은 김소연 분회장과 기륭 동지들이 26일 금속노조를 찾아 눈물과 분노로



절규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조선일보는 23일자 기사에서 "서명 당일 회사와 노조 측이 보상금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여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본 기륭전자 동지들은 분노했다. 기륭 동지들은 돈 받고 끝낼 투쟁이었다면 3년을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와 정권은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인 기륭 투쟁을 돈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기륭공대위는 기륭, KTX,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추석이 되기 전에 일터로 돌려보내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 1만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와 동조단식, 연대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기륭 조합원들을 외면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 총자본과 정권에 맞서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해내야 한다. 15만 조합원을 넘어 850만 비정규직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개헌투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기획-개헌과노동자①] 노동자에 개헌이 중요한 이유 ... 모든 권력은 민중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8월 2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건국 60주년,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극우보수세력이 2/3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은 언제든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화인 '개헌'에 대해 노동운동은 상당히 무심한 것으로 보인다. <변혁산별>은 특별기획으로 이명박의 개헌에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신는다.

<특별기획> 이명박 개헌과 노동자

1. 노동자계급에 개헌이 중요한 이유
2.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3. 남미 좌파정권의 개헌투쟁의 의미
4. 노동자 민중을 위한 개헌 투쟁

<편집자 주>

정치권에 개헌논의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내용이지만 자본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의 보수 세력들은 이참에 정부의 형태와 자본에게 유리한 사회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헌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뒷전이다.

최고 권력의 주권은 국민이 보유한다



먼저 헌법이란 게 무엇인가?

헌법의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은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헌법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립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국가 권력구조의 개편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정치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유리한 점을 추구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 과연 대통령 임

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번 개헌 논의에서는 오히려 최근 광우병 쇠고기 정국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도 개헌 논의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노래가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촛불집회에서 많이 불려 졌던 이유도 국민의 주권재민과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 민중들이 정치권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후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 민주화대투쟁의 산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벌써 20년이 넘는 헌법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인데,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사회공공성 개헌에서 제기돼야 할 기본권

특히 국민의 일반적인 기본권은 이제 세계적인 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수준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 ‘조중동’ 철독운동에서 드러난 표현의 자유, 공기업 민영화에서 드러난 사회공공성 가치의 우선성 등을 개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되고 확장, 강화되어야 할 기본권들이다.

이러한 기본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정권과 자본이 의도하는 권력획득을 위한 개헌을 막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기본권의 확장을 무시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헌 논의의 장은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은 많다.

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 철폐

우선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항들이다.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은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은 철폐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력 12위니 하면서 정작 그에 상응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형편이 없다. 공무원에 대한 기



본권의 확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1991년 세계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2002년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방위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기본권의 지나친 억압일 뿐이다.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의 사명’(헌법 전문)을 천명하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을 전제로 한 ‘주요방위산업체 단체행동권 제한’은 어불성설이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꼭 이 부분을 제한한다 해도 최소화해야 하고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준 전시상황 등에 한해서 방위산업체에 단체행동권을, 그것도 필수 부문에만 제한하는 정도로 최대한 노동3권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헌 헌법 “사기업 근로자 이익분배 균점권 보장”

지금의 우리들이 들으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헌 헌법에는

‘이익균점권’이라는 노동자의 권리가 들어 있었다. 제헌헌법 제18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만드는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생계비 이하의 임금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익균점권’은 하늘나라의 이야기 같다고 할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엄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익균점권’은 1960년 11월29일 네 번째 개헌 때까

지도 그대로 있다가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서 사라졌다.

지금 이것을 되살리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공론화시키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의 개헌이었던 87년 개헌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엄청난 호기라고 할 수도 있다. 최근의 정국은 시민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너무나도 제한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러한 각 개인의 느낌과 의견이 옛날과는 다르게 인터넷 등을 통해 폭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개헌, 이명박 지지율 하락 돌파 계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시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조차 개헌논의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상태다. 이는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개헌 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계산만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